5·18피해자 강제징집·삼청교육대 입소 광주역 첫 집단발포 최세창이 현장지휘

5·18조사위서 공식 확인된 사실들

북한군 주장 허위…김군 신원 확인 무명열사 묘역 2명 신원도 밝혀져

12일 오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된 대국민 보고회에서 차복환씨가 자신이 사진 속의 김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 보안사 등 국가기관이 5·18피해자들을 강제징집하거나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는 의혹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5·18 첫 집단발포였던 광주역 발포 당시 전두환의 심복으로 꼽혔던 '공수부대' 지휘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허공에 권총 3발을 쏘며 현장 지휘를 하기 전 "(상급 지휘관에)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의 증언도 확인됐다. 아울러 극우인사로부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일명 광수)'으로 조작, 지목됐던 '김군'은 '평범한 시민'으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20일 광주역 집단발포, 최세창 지휘" 진술 확인='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5·18 당시 시민을 향한 첫 집단발포였던 5월20일 밤 광주역 발포가 있기 전, 광주에 투입됐던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현장 지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역 집단발포가 있기 전 3공수여단장 최세창이 (탕탕탕!)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했다는 구체적 증언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역 발포는 박모 대대장 등이 시위대의 차량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의 바퀴에 대고 권총을 발사했다는 본인의 수기, 광주역 일원에서 발포에 의한 사망자 4명, 부상자 6명 발생 등이 확인됐는데,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 530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5·18진상조사위는 최세창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별도의 명령계통에 의한 집단발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5·18 북한군 투입은 '가짜'…'김군' 신원도 확인=또한 5·18진상조사위는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5·18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은 국내외 각종 기록조사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국정원은 북한군 투입 관련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육군과 해군, 미국 국무부,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를 통해서도 5·18과 관련한 북한 특수군 침투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최초 주장한 탈북자 정모씨가 '5·18 당시 본인은 평양에 있었다'며 기존 주장은 거짓이라고 직접 밝히는 등 실체가 규명된만큼 관련 조사는 종결키로 했다고 5·18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아울러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의 사진 속 인물 즉, 극우 인사 지만원에 의해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1번'으로 지목되었던 '김군'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차복환씨로 확인됐다. 영화속 '김군'으로 알려진 광주 금남로 페퍼포그 차량 위에 기관총을 잡고 탑승해 있던 시민군의 실제 인물은 광주시 남구 효덕동에서 1980년 5월 사망한 '김종철'이 아니라 당시 광주에 있었던 차복환씨로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5·18진상조사위 설명이다. '김군 사진'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은 당시 한 신문기자에 의해 연속촬영된 사진 중 하나로, 지만원은 그를 가리켜 광수1번으로 지목며 북한의 농업상 '김창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제보가 5·18기념재단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5·18피해자 강제징집·삼청교육대 입소 확인=5·18 피해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입소 등 지속적으로 인권탄압을 받아왔던 실체도 드러났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돼 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녹화사업'에 동원되거나, 불량배 소탕 계획인 삼청교육대 대상자로 분류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인 문건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5·18 피해자를 강제로 징집해서 보안사령부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동향 관찰, 의식순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녹화사업에 강제 편입시킨 사례를 현재까지 10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의 경우 계엄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특수학변자'로 분류해서 보안사에서 관리했고, 이들의 병적기록표에는 '광주사태 시 모 부대 유치장 구금' 내지 '광주사태 관련 특수학변자' 등으로 표시해 낙인찍었다. 강제징집 등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제대 이후에도 보안사에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사실도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5·18진상조사위는 광주·전남지역 삼청교육대 입소자 총 2135명 중에서 5·18 관련자를 분류, 조사 중이어서 피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5·18 무명열사 묘역 2명(행불자) 신원 확인=42년 동안 이름 없이 묻혀있던 무명열사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무명열사는 고(故) 김재영(당시 만 17세)군과 고 김광복(당시 만 14세)군으로 확인됐다.

김재영군은 행방불명자 명부에서 고아로 표기돼 있어 유전자정보가 없었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해 여동생을 찾아 유전자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 김광복군은 지난해 묘지 주인이 확인된 고(故) 양창근 열사의 묘역(묘지번호1-38)에 묻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김군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신동남(묘지번호 4-90번·1950년 6월 30일 생)씨가 확인된 데 이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5기의 무명열사 묘 중 2기의 신원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북구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A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였다.

50대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이 건너던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장과 친분 있다" 속여 6억 뜯어낸 2명 구속

광주시장과 친분이 있는것처럼 속이고 공공기관 채용을 미끼 삼아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1년여 동안 "자녀를 철도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6억원을 뜯어낸 60대 A, B씨를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고향 함평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용섭 광주시장과 동향 출신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시장 측근을 자처하고, B씨는 피해자들에게 A씨를 연결해주고 취업 알선비를 받아 챙기는 '모집책' 역할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왜 취업을 시켜주지 않느냐"며 광주시청 비서실에 문의하면서 들통났다. 광주시는 지난 11월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광주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휴대폰을 해지하고 잠적했으나,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약하면서 거처가 탄로나 붙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 또한 "A씨가 정말로 이 시장과 친분 있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을 토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A·B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근로자 추락사 하루 뒤에야 발견…업체 관계자들 유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한 지 하루 뒤에야 발견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임원 A(52)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51)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와 시공사는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공동 시공사 한 곳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지위상 감독 의무가 있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사망 당시 58)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5~6층 계단에 놓인 1.5m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추락했으나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야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현장 작업자 출입 확인, 2인 1조 작업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A씨가 밤늦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냈다. A씨는 생일인 다음 날 아침 동료 노동자에 의해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교원 징계 요청 불이행 사학법인 2곳 과태료 부과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교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불이행한 사립학교법인 2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고려학원 소속인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려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 결과, 다수의 학사 비리가 확인돼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징계불이행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 후 올해 고려학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